

투데이 칼럼

북한 하급 간부들

동 일을 하려면 북한 하급 간부들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남북한의 통일 정책이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이 괴를 나눈 형제가 아닌 주적이거나 선연하고 통일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지웠다.

한국 대통령은 8·15 광복절 연설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긍정하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상황이 개선된다면 통일을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2007년 71%에서 2023년 45%로 떨어졌다.

통일에 대한 지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역대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통일 정책을 추진해왔다. 북한의 통일 정책 폐기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북한은 경제·문화면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한국이 북한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강조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는 북한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대통령 연설 이후 북한은 철저히 침묵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주민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



정복규
논설위원

냐 하는 것이다. 북한 최고 엘리트층인지 일반 주민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위치한 계층인지 말이다.

북한 최고 엘리트층이 만족하고 동시에 한국 국민이 만족하는 통일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 방식은 북한이 이미 '흡수 통일'이라고 일축한 방법이다.

북한 최고 엘리트층의 권력·지위·부를 빼앗는 방식이다. 독일 통일 당시 북한 정권은 간부를 대상으로 공원에서 전전하는 궁핍한 삶을 사는 동독 공직자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냐고 교육했다. 만약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 지도층이 일정한 권력을 보장받는다면 한국 국민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북한 지도층은 권력 투쟁에만 능

하고 현대적 통치 기술은 전무하다. 더군다나 인권유린 범죄에 가담했던 자들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상황에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에 정답은 없다. 통일로 인해 동독 인사들이 겪어야 했던 결과로 아직도 옛 동독 측에는 앙금이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남예멘과 북예멘의 통일 후 남아있던 전 남예멘 인사의 원한은 결국 예멘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북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평화 통일의 장점을 설득시키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이 빈곤 탈출과 삶의 풍요를 가져다줄 거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주민에게 이를 알리는 일이다.

북한 정권은 주민에게 외부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

저한 방어막을 세웠다. 문제는 지도층과 주민 사이에서 전략적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명령을 실행하는 1백만 명의 하급 간부 세력이 있다.

이들은 평양에 주거하며 대부분의 북한 주민과는 달리 정보와 USB를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의 통일 정책 폐기를 실감했을 이들은 평화 통일의 장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다.

북한 정권 지도부가 "충성도가 약화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한탄하는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평화 통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이 통일을 원하게 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더 나은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존경과 특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문제가 통일로 가는 길목이다.

북한 하급 간부층은 인권 유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이 인권을 강조하면 할수록 통일된 한국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이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들이 통일을 지지하려면 처벌 면제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

독자제언

스토킹 범죄,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톱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칭한다. 스톱킹 범죄는 전 연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스톱킹의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고를 주저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용기내서 꼭 신고하여야 한다.

스토킹 피해를 봤을 경우, 신고하면 상대방이 나의 주거지나 직장 등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차단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스토킹 범죄를 절대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하는 제니퍼 로페즈



가수이자 배우인 제니퍼 로페즈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네바다주 노스라스베이거스의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로페즈는 "여성은 이번 선거에 변화를 불러올 힘이 있다"라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

사설

주택담보대출 급증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인 8조4천억 원이나 불었다. 주가 급락을 기회로 주식 투자 등에도 돈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까지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천억 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 원) 반등한 뒤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월 증가액도 7월(5조4천억 원)보다 약 4조 원이나 많았다. 2021년 7월(9조7천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6천억 원)이 8조2천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4천억 원)도 1조1천억 원 각각 늘었다.

특히 8월 주택담보 대출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 대출 증가로 이어진 게 가장 주된 요인이다.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휴가 자금, 주식 저가 매수 등의 8월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금리인하 전망 등 불안 요인이 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한 달 사이 3조4천억 원에서 5조3천억 원으로 커진 것은 은행의 대출 영업, 중소기업의 시설 자금 수요 확대 등 때문이다.

정기예금도 은행의 예금 유치 노력, 예금 금리 고점 인식 등에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천억 원 증가했다.

상급 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확대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 대처 방안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말 1차 실행 방안을 내놨다.

특위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상급 종합병원에 경증 환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 행위 대가도 인상한다. 3년 안에 3천 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해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인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그동안 중증 환자들이 집중 치료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현재 '빅5 병원'의 경우 60% 정도가 중증 환자, 40% 정도가 비중증 환자로 경증환자의 쏠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중증 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상향하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를 줄여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낮은 수가 문제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체 건강보험 수가 9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낮은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키로 했다.

일단 3,000여 개의 저보상된 전체 의료 행위를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수가 전면 조정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가 참여해 대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